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위한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 2020~2024 -

2020. 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목적	1
II. 추진경과	2
III. 지난 10여년의 실적과 한계	3
IV. 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해외 동향	6
V. 비전과 추진전략	8
VI. 추진과제	10
VII. 추진체계 및 일정	59
[붙임] (旣)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계획 분석	65

I.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지난 10여년간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점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 개발
 -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06년), 선진화전략('09년), 중장기업무계획('13년)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17년)가 제안한 혁신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 * (공공기록관리) 5대분야, 24개 혁신과제, 58개 세부과제
 -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 4대분야, 9개 혁신과제, 13개 세부과제
 - 생산·이관·수집, 등록·재분류·지정, 보존·복원·시스템, 서비스·전시·교육
- 국가기록관리 비전* 및 미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현용·준현용·비현용 단계별 정책과제 마련
 - *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목적

- '05년 혁신로드맵, '17년 혁신추진의 단절성을 극복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의 일상적 추진 도모
- 보여주기 식(式), 국가기록원 주도의 하향식 혁신을 극복하고 기록관리 공동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기록관리 혁신 추진
- 기록관리 주체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국가기록관리 중장기('20~'24) 정책 방향 및 혁신과제 제시
 - 급격한 행정 및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기록생산기관·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업무의 일관성 확보
 - 국민이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

II. 추진경과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19.2.27.)**
 - 중장기 발전 전략 작성 방안 및 추진일정 수립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원내 13명, 원외 25명(중앙행정기관 6, 지자체 6, 교육청 7, 공공기관 6) 구성(3.8.)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1차 간담회(3.20.)
 - 기획단 구성 취지,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 소개,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워크숍(4.11.~4.12.)
 - 비전·미션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비전·미션 제안, 운영방안 논의 등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단 간담회(2차~6차)
 -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안) 검토, 국가기록관리 현황 분석, 중장기 발전전략 기본방향 및 목표 토의, 생산단계·기관 기록관리단계·아카이브단계로 구분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의견수렴 등
- **「2019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시 국가기록관리 비전·미션 선포(6.7.)**
 - 비전 :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 미션 : 1.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로 열린정부 구현
2.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 확립
3.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마련**
 - 제11회 전국기록인대회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안)' 발표·토의(11.2.)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안) 원내·외 의견수렴(11월~12월)
 - 7차 기획단 회의,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안) 마련(12.30.)
 - 각급 기관·학계 등 의견조회 및 보완('20.1.15.~1.31.)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실행계획(안) 마련('20.3.~4.)
 - 제1회 정책전문위, 제55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6월) 및 최종 확정(0.00.)

Ⅲ. 지난 10여년의 실적과 한계

1 주요 실적

□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05년 혁신로드맵 추진과 더불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2007),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7)
- '국가기록관리 혁신 TF'(17년)의 혁신과제 제도화 및 조직 정비 추진
 - 공공기록물법 개정(폐기중지제도 도입, 기록관 역할·기능 강화, 기록의 날 제정 등), 동법 시행령 개정(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기록관 설치기준 등)
 -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조직개편('19.1.) 실행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 행정기관(751개*)·정부산하 공공기관(189개)·대학(47개)등 기록관 설치 확대
 - * 중앙부처(48) 및 소속기관(135), 대통령 관련(3), 군기관(127),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8), 교육청(광역17, 지역176)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기록보존소 설치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공감대 형성 및 선도적 설치
 - 경남('18.5.), 서울('19.5.) 지방기록원 설치 및 운영
 - 8개 시·도(부산, 대구, 경기 등) 지방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 4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제주) '20년 연구용역 예정

□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요원 배치 증대

- 전문인력 양성 기관* 및 전문요원 자격취득자** 증대
 - * (대학원) '07년 17개 → '19년 25개 / ** (자격취득자) '07년 389명 → '19년 2,383명
- 전문적 기록관리 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확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관 현황

연도	중앙·지자체·교육청			공공기관·대학					
	200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14	407	447	497	539	574	590	602	
			152	165	151	213	230	253	301
	63	21							

□ 기록물 생산 및 인프라 구축 등 양적 성장

- 전자기록물 생산 증가* 및 본격 이관**
 - * '15년(60,119만여건), '16년(63,664만여건), '17년(64,591만여건), '18년(63,648만여건)
 - ** '15년(238만여건), '16년(282만여건), '17년(320만여건), '18년(294만여건), '19년(320만여건)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 기록물 증가
 - (기록원) '07년 155만권(문서), 178만점(시청각)→'19년 421만권(문서), 546만점(시청각)
 - (국회) 비전자 16만권, 전자 213만건 / (법원) 비전자 19만권, 전자 859만건
- 국가 중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확충
 - 나라기록관('08년), 역사기록관(리모델링, '10년), 대전기록관('13년), 대통령기록관('15년)
-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CRMS) 전환
 - 중앙부처·군기관·지자체·교육청 100% RMS 도입, 중앙부처 CRMS 전환

□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및 서비스의 양적 확대

-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 서울(기억의 힘)·경남(기억, 기록을 만나다)기록원, 국회(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록원(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 기획전 수시 개최
 -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문화탐방, 기록사랑마을, 시민 기록문화 프로그램 지속 추진
- 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열람('07년 511,892건→'19년 1,281,897건), 원문서비스('14년 569만건→'18년 2,027만건)



□ 기록관리 학회·협회 등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 성장·발전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설립
- 전국기록인대회(11회), 아키비스트 캠프(7회) 등 개최

□ 민간영역 기록관리 인식 확대 및 분야별 아카이브 설립

- '시민 아키비스트 아카데미', '생활문화 기록학교', '우리동네 기록학교' 등 운영
-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국악·미술 등 예술아카이브, 인권아카이브 등 설립

□ 중장기적 관점으로 기록관리 혁신의 지속적 추진 필요

- '05년 혁신 로드맵 이후 기록관리 혁신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어 성과 및 효과 미흡
 - ※ [붙임] (既)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계획 분석
- '17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TF」에서 제시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였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과제 발굴 및 보완 필요

□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질적 변화 미흡

- 각급기관의 주요 업무기능과 관련된 기록 생산이 여전히 미흡하고, 업무 수행 과정의 기록화 확인 및 통제 수단 부재
- '07년 정부기능분류체계 기반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 통합 이후 업무분류체계 통제권 상실 등 내실 있는 운영 미비

□ 기록물관리기관 균등발전·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구분 모호, 상호 협력 체계 부재
- '07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 서울·경남만 설치
- 관할 조직 기록관리 책임기관으로서 기록관의 기능·역할 부재
 - 기관별 1개의 단일 유형 기록관, 1인 기록관 체제로 기록관 기능 획일화 및 자율성 제한
 -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의 경우 조직·인력 등의 인프라 취약

□ 대국민 기록문화 확산 부족 및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운영

- 기록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중심의 기록문화 체험교실 운영에 한정, 민간아카이브 등 타 기관과 연계 부족
- 서비스의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운영으로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에는 미흡

IV. 기록관리 환경 변화 및 해외 동향

1 환경 변화

□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요구 증대

-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의 기록관리 관심 지속 증가
- 시민사회가 기록을 정보 및 문화 자원으로 인식
- 증빙기록 위주의 기록서비스에서 국가 주요 정책, 역사적 또는 사회적 현안 관련 기록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 국가기록관리 혁신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국가기록원 중심의 일방적 혁신에서 벗어나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 추진의 공감대 형성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체성 확립, 기록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록관리 혁신을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 추진 요구

□ 기록공동체와의 협력 확대 및 민간아카이브 활성화

- 기록관리 전문가 수의 증가 및 공동체 형성, 교류·협력 확대
- 지역민·시민단체·학계 등의 자생적 민간아카이브 활성화
- 공공영역 중심의 기록관리에서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위한 방향 모색

□ 전자기록관리 환경변화 및 관련법의 제·개정

- 신기술·업무 등장의 가속화, 공공부문 업무전반의 자동화 및 지능형 플랫폼 확산 등으로 공공부문의 업무환경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 ※ 정부 업무에 ICBM*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의 도입·활용 가속화
 -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전자문서법 등 전자기록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 확대
 -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2

해외 동향, 시사점

□ 해외동향

구분	정책목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2018-2022 전략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록에의 접근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비율 82%까지 확대, 5억 쪽 디지털화, 디지털 차세대 검색 도구 지원이 가능한 비율을 95%까지 확대 2. 고객과의 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요청 처리 비율을 93%로 높임, 만족도 90%까지 확대 등 - 연방기관의 전자기록관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 마련 3. NARA의 존재가치 극대화 4.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의 건설
캐나다 국립도서기록관리청 (2019-2022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들과의 관계, 소장기록물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2. 수용성 있는 조직, 지속성 있는 컬렉션 개발 3. 협업 노력, 결과의 확산
영국 국가기록원 (2019-2023 전략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록원의 문화와 접근 방식 변화 2. 역사적 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3. 새롭고 포괄적이며 흥미로운 가상공간의 컬렉션 구축 4. 공무원과 국민을 위한 필수자원, 법적 증거력 제공 5. 평가, 선별, 기술, 디지털 보존 및 접근에 대한 방식 개척
호주 국립기록원 (2017-18년- 2020-21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공식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있고 사용 가능한 진본성 있는 연방기록의 생산·관리·보존 촉진 - 국내외 아카이브즈 공동체에 대한 호주의 참여 지속 및 강화 2. 국가의 영구보존 기록 컬렉션과 정부, 연구자, 국민을 가치 있게 상호 연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영구보존 기록 컬렉션 및 그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 증진 - 소장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 시사점

-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록의 생산·관리·보존 등 기본 업무 충실
- 소장기록물의 온라인서비스 및 열람 강화 등 접근 확대
- 급변하는 IT환경 등을 반영하여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아카이브즈 구축
- 유관단체, 학계, 관련 기관 종사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체계 강화
- 기록관리 종사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V.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신뢰받는 기록관리로 정부는 투명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미션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기록관리로 열린정부 구현
-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록관리체계 확립
-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정착으로 민주주의 강화

- (보존 → 서비스) 기록물의 보존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공개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선도
- (기록원 주도 → 각급 기관) 국가기록원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아닌,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혁신 추진
- (정부 중심 → 민간·학계·산업계) 공공영역 중심에서 민간아카이브·학술단체·산업계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 (정책 제시 → 실행 중심) 선언적 정책에서 벗어나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및 일상적 혁신 추진으로 성과 창출

1

추진방향

< As is >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기록화	생산의무부여, 규제 중심
기록관	단일유형 기록관리 자율성 미흡
아카이브	기록원 중심, 기관별 고립성
거버넌스	공공영역 중심의 기록관리체계

< To be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다양화
기관 책임하 기록화 대상 명확화
기록관 유형 다양화, 자율성 확대
상호간 협력을 통한 균형 발전
민간·학계·산업계로 교류·협력 확대

추진목표	2020~21년	2022~23년	2024년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관리제도 정비 및 역사기록 공개 *비현용기록 공개·열람 제도, 조선총독부 기록부터 단계적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서비스전략 수립 및 시행, 전문 열람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물 원문 재사용 플랫폼 구축·운영 *OCR 적용 디지털화 및 원문서비스 대상 확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 기반 마련 *평가정책 수립, 기록화 및 대상 기준 마련,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평가체계 운영 *부처별 보존기간 준칙 마련,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부존재 사후 책임제도 도입
기관 기록관리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관 특성 반영, 국가 기록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유형별 기록 관리체계 개선 *중앙↔소속기관 기록관 체계 개편, 지자체·교육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제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 책임성·자율성 강화 기반 확충 *권한 확대 및 조직체계 재설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인력·시설·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
아카이브 역할 정립,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별 기록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관 특성 반영, 국가 기록관리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별 소장 기록 관리·보존체계 구축 *수집·이관체계, 지적통제, 보존시설·장비 확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기관 조직체계 구축 및 지방기록원 설치 확대 *헌법기관아카이브-기록관 체계 정립
기록관리 진흥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네트워크 구축 *기록물관리기관, 민간, 학계, 산업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관리위원회 조직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공공 및 민간영역 포괄
전자기록 관리 체계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록 장기보존 체계 구축 *기록유형별 보존포맷 기준 수립 및 권고포맷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종합 관리시스템 및 웹기록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관리 시스템 개발·확산 *표준 AMS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용 RMS 개발·확산 등

VI. 추진과제

《 5대 전략 11개 추진과제 》

1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②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
2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저한 기록화 기반 마련 ② 업무·기록분류체계에 기반한 통합적 기록관리 절차 정립
3	기관 기록관리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② 기관유형별 기록관리체계 개선 ③ 기록관의 인프라 확충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구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② 국가 중요기록물 관리·보존체계 확립
5	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할 강화

〈전략 1〉은 국가기록관리의 핵심 역할을 ‘기록정보서비스’로 설정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와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아카이브의 역할은 ‘기록의 보존’에서 ‘정보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용자(일반국민, 학술연구자 등)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전략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역사기록의 적극 공개와 더불어 재사용 가능한 원문서비스 확대, 학술 연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록의 날(6월 9일)’ 법정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그간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기록문화 사업을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추진과제 》

1-1.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① 대국민 기록 접근권 확대
- ②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강화

1-2.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

- ① 기록연대에 기반한 ‘기록의 날’ 정착
- ②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기록문화 확산과 지원

1-1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 ▶ 국민이 사·공간적 제약 없이 기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 ▶ '공개' 중심이었던 기록물 서비스 패러다임을 '학술·연구 지원'으로 전환

1-1-1. 대국민 기록 접근권 확대 ㉠

□ 추진배경

- 기록정보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화 등 대국민 서비스 기반 미흡
 -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 총 108백만건 / 공개 40백만건(37.7%), 부분공개 36백만건(28.4%), 비공개 36백만건(33.3%) / 디지털화 33백만건(31%, 전자기록·행정박물 제외)('19.12월 기준)
- '권리구제', '증빙용' 기록정보 서비스에서 벗어나 서비스 대상과 범위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 ※ 국가기록원 원문서비스(총 2,027만건)의 약 78%(1,595만건)가 토지 관련 증빙 기록('19.12월 기준)

□ 추진목표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기록물의 원문서비스 대상 확대
 - ※ (국가기록원) '20년 160만면, '21~'22년 700만면, '23~'24년 1,400만면 디지털화
- 기록물 원문 재사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실시('24년)

□ 추진내용

- (원문 서비스) 비전자기록 디지털화 대상 대폭 확대 및 전자기록 열람 절차 개선을 통해 대국민 기록물 원문 접근성 강화
- (서비스 개선) 디지털화 기록의 검색·활용을 위한 문자인식 성능 개선, 키워드 추출 및 색인 생성 자동화 등 연구개발 추진
 - ※ 기록물 디지털화 시 OCR(광학문자인식) 및 인공지능 기술 적극 활용
- (플랫폼 확대) 아카이브 기록을 학계·문화계·산업계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 ※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 검토·보완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개선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1-1-2.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강화 罎

□ 추진배경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단순 제공 서비스에서 벗어나, 학술·연구 등 전문분야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체계 전환
 - ※ 국가기록원 '19년 열람 128만건(기관 56만건, 국민 72만건) 중 행정·재산 인사 기록이 62%(80만건)
- 기록물관리기관 보유 기록도 현용기록 중심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기준 적용으로 역사기록물 등의 공개 및 활용에 제한 초래
- 주기적인 재분류에 따른 공개 대상이 인사, 법령, 인허가 등에 치우쳐, 주요 정책·역사기록에 대한 적극적 공개 재분류 필요

□ 추진목표

- 역사적·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카이브 소장기록의 적극 공개
 - ※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기록 등 역사기록 전면 공개('21년~)
- 역사기록 공개 기준과 절차 마련 등 공개관리제도 일제 정비(~'21년)
- 학술·연구자를 위한 특화서비스('21년~) 및 열람센터 개편(~'21년)

□ 추진내용

- **(연구지원 서비스 개발)** 학술·연구 목적의 이용자군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서비스전략 수립 및 서비스 방안 마련·시행
- **(파트너십 구축)** 학술연구자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역사성·시의성 있는 기록정보에 대한 기획재분류, 분류·기술체계 개선 추진
 - ※ 역사기록(조선총독부 등) 적극 공개, 주요 정책·사건 기록물 컬렉션 구축 등
- **(제도 개선)** 역사기록의 적극 공개, 연구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현용기록: 「정보공개법」, 비현용기록: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
- **(열람센터 개편)** 학술열람/기관열람/개인증빙 등 특화된 기능 중심 전문센터로 기록물 열람체계 개편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1-2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

- ▶ '기록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기록의 중요성을 대국민에게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시행

1-2-1. 기록연대에 기반한 '기록의 날' 정착 영기민학산

□ 추진배경

- '기록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19.12.3. 시행)을 계기로,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록문화 조성
- 그간 '공공기관 기록관리 종사자' 중심으로 개최되던 행사를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전환

※ '기록의 날' 운영

- (행사) '11년 첫 기념행사 후 '17년부터 매년 개최(총 4회)
- (대상) 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 종사자, 학계 등
- (내용) 기념식, 학술회의, 기타 부대행사(공모전, 특별전 등)

□ 추진목표

- 민·관·학이 공동주최하는 '기록의 날' 및 '기록 주간' 운영('20년~)
- '기록주간' 국민 참여율 확대(매년 전년대비 10% 확대)

□ 추진내용

- (기록의날 정착)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학술단체 등 기록공동체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기록연대의 장 마련
 - ※ 각종 협의회 및 이용자 대표 등으로 '기록의 날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대국민 인식 확산) '기록 주간'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급기관별로 발굴·운영하여 기록문화 인식 확산
 - ※ 공모전, 백일장, 전시, 워크숍, 컨퍼런스, 강연 등 대국민이벤트 집중 시행

추진주체 : 국(기록관), 영(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학(헌법기록물관리기관), 산(지방기록물관리기관)

1-2-2.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기록문화 확산과 지원 [영][기]

□ 추진배경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전시, 학생 대상 체험 학습 등 획일화된 기록문화 사업 운영

※ 국가기록원 기록문화 확산 추진 현황

- 기록사랑 공모전('19년 533명), 기록문화탐방 등 전국단위 행사 개최
- 견학, 체험 등 권역별 기록문화 확산사업 추진('19년, 434회 / 11,469명)
- 기획전시('08~'19년, 총 41회) 및 상설전시관 운영('13~'19년, 870,951명)

- 기록물관리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록문화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및 공간 개방 필요

□ 추진목표

- 다양한 주제·형식의 기록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20년~)
- 국민적 관심도 분석에 따른 단계적 아카이브 개방('22년~)

□ 추진내용

- **(확산모델 개발)** 체험·견학·전시·강좌 등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별로 국민참여형 기록문화 확산모델 개발 및 운영

※ 기록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눈높이의 기록문화프로그램 마련

- **(아카이브 개방)**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전시관 주말 운영, 열람실 운영시간 확대, 공용공간 개방 등

〈전략 2〉는 각급 기관별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의 선언적 과제에서 탈피하여 기록 생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 시청각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내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추진 과제 》

2-1. 철저한 기록화 기반 마련

- ① 국가기록관리 평가정책 수립 및 시행
- ②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및 제도 개선
- ③ 기관별 기록화 대상 기준 수립

2-2. 업무·기록분류체계에 기반한 통합적 기록관리 절차 정립

- ①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강화
- ②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확립 및 단계적 확산
- ③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
- ④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
- ⑤ 기록 메타데이터 재설계

2-1

철저한 기록화 기반 마련

- ▶ 공공기관 책임 하에 기록 생산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업무수행 전 과정을 기록화하도록 평가정책 수립 및 기록화 대상 기준 마련

2-1-1. 국가기록 평가정책 수립 및 시행 ☐☐

☐ 추진배경

-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의 생산과 선별을 위한 평가정책 미흡으로 중요 기록의 보존 부실 우려
- 모호한 보존기간 책정기준으로 기록물의 적정 보존기간 부여 곤란
- 기록관리 환경 변화 대응 및 누락 없는 기록화를 위해 기록 평가정책 재설계 및 평가 선별 도구 개발 절실

☐ 추진목표

- 국가기록 평가정책 수립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정비(~'22년)
- 부처별 보존기간 준칙 개발 및 적용(~'24년)
-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정비 및 표준화(~'22년)

☐ 추진내용

- **(평가정책 수립)** 국가 차원의 기록화 전략, 평가 기준·대상, 평가 도구·절차, 책임과 권한 등 국가기록 평가정책 수립
 -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중요기록의 보존을 위한 평가선별 정책 및 영구보존 대상 기록물 식별 기준 마련
- **(보존기간 책정준칙 개발)**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시행령 별표1) 정비, 기관별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 준칙」 개발 및 운영 지침 마련
 - ※ 보존기간 7종(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유연화 등 포함
- **(공통업무 보존기간 정비)** 처리과·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정비 및 표준화 추진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2-1-2.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및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07년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기반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 통합 이후 단위과제 신설·변경 통제권 상실 등 내실 있는 운영 불가
 - ※ BRM 단위과제 운영 관련 현황조사('19.3~5),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시범 정비('19.9~'20.2)
- 공공기관에서 생산되어야 할 기록과 보존기간 책정·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 점점 필요
- 기록물의 분류, 편철 및 관리의 기본 단위인 단위과제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기록분류체계를 정상화하고 적극적 기록통제 기반 마련

□ 추진목표

-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정비(~'24년)
- 단위과제 신설·변경절차 등 관련 제도 개선('20년)

□ 추진내용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 ※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기준표 개선 지원 사업 추진('20~'24년)
 - (대상/기간) 매년 7~8개 기관 / 약 5개월
 - (내 용)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정비
 - (추진 체계) 국가기록원(사업총괄, 보존기간 협의), 중앙부처(개선안 검토, 부서협의)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표준화

- ※ [전략3] 기관 기록관리 책임성 강화와 연계 추진

- **(제도 개선)** 단위과제 신설·변경 절차 등 관련 제도 개선

- 단위과제 신설·변경 시 기록관의 사전 협의/사후조정 권한 확보
- 기록관에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신설하여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지속적으로 점검·유지

2-1-3. 기관별 기록화 대상 기준 수립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상 기록물의 정의 및 기록화 대상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록물 여부와 관련한 해석상 문제 지속 발생
※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NLL 사건), 경찰청 정보보고서 무단파기 논란, 업무 PC 저장 파일의 기록 해당 여부 등
-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기록 부존재에 따른 제재수단 부재 등으로 공공기관의 기록 생산·관리 부실 초래
- 공공기관의 기록 생산·관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기록화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록부존재에 대한 사후 책임제도 도입 필요

□ 추진목표

- 공공기관별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기준 마련('21년)
- 기록부존재 사후 책임제도 도입('23년)

□ 추진내용

- **(기록화 기준 마련)** 공공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 생산·관리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 시범기관 선정 → 시범기관 기록화 대상 기준 마련 → 각급 기관 확산
- **(기록화 대상 선정)** 기록화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고유업무, 법적 의무 이행기록 등 기관별 기록화 대상 선정
-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기록물 미생산·미등록에 대한 사후 책임 제도로 '기록부존재 사후 책임제도' 도입
※ 제도 도입 관련 정책연구용역 및 각급기관·학계 등과 공론화, 시범적용 병행 추진

2-2

업무·기록분류체계에 기반한 통합적 기록관리 절차 정립

- ▶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전자문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비정형 기록 등

2-2-1.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기록의 안정적인 이관과 관리를 위해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과 메타데이터의 전반적 점검 필요
 - ※ '08년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보급 이후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교육청이 사용(중앙부처는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시스템 구축('15~'19년))
- 클라우드 적용, 대용량 특수유형 기록 생산 등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기능 및 이관절차 개선

□ 추진목표

- 업무관리시스템 차세대 기록관리 기능 구현('20년) 및 확산(~'22년)
- 기록 생산 관련 규정 일제 정비(~'22년)

□ 추진내용

- **(기록관리 강화)**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기능 및 메타데이터 점검·개선
- **(저장소 통합)** 업무관리시스템-기록관리시스템 간 물리적 이동 없이 이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스토리지 공유 및 프로세스 개선
-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등 전자기록 생산·관리 관련 법규 검토·정비
 -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개선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 강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4조의 2), 「공공기록물법」에 기록 생산 관련 규정 통합 등

2-2-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확립 및 단계적 확산 ㉠㉡

□ 추진배경

- 행정정보화('90년도~) 추진으로 국가 주요 기록*들이 대량의 데이터세트로 전환되었으나, 기록관리 기준 반영이 미흡하여 기록관리 누수 발생
 - *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인사카드, 운전면허 등 카드·대장 형태의 기록이 행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형식으로 관리 중
-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약 1.6만여 개*)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기록관리 방안 필요
 - * '20년 2월 범정부 EA 기준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해야할 주요 전자기록으로, 체계적 기록관리를 통해 투명행정 구현 필요

□ 추진목표

- 행정정보시스템 기록관리체계 적용 확산(~'24년, 매년 50개 시스템)
- 국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2년)

□ 추진내용

- **(기록관리 체계 확립)**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원칙, 관리 기준 및 이관·보존·처분 등 관리방안 마련·시행
 - ※ 기관별, 유형별 분석 및 시범 적용을 통해 참조모델 확대, 표준화
- **(시스템 구축)** 국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 관리기준표 등록·관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지원도구, 인수·보존, 열람 및 활용 등
- **(서비스 방안 마련)** 아카이브 단계에서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보존·관리 및 열람·서비스 방안 마련
- **(협업체계 구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유관 기관 및 부서와 협업 체계 구축하여 공조방안 마련
 - ※ 시스템 운영부서(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협업방안 정립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2-2-3.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 ㉠㉡

□ 추진배경

- 웹기록, SNS, 전자매체, 대량·다종의 디지털 파일*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 전자기록이 생산되고 있으나 관리방안 미비
 - * 기관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유 스토리지, 웹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저장된 파일
- 기록정보에 해당하나 구조와 형태가 정형적이지 않아 기존의 기록 관리체계 적용이 불가하므로, 비정형 전자기록에 맞는 등록, 이관, 보존, 활용 체계 마련 필요

□ 추진목표

- 웹기록 관리절차 정립('22년) 및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23년)
- 전자매체별 관리방안 마련('20년) 및 가인수시스템 개발·운영('21년)
- 대량·다종의 디지털파일 관리프로세스 수립('21년)

□ 추진내용

- **(웹기록)** 웹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마련 및 수집·활용방안 확보
 - 가치에 기반한 웹기록 선별기준 및 수집방식* 재정립
 - * 직접이관, 웹크롤링 등 웹기록 수집방식 전면 재검토 포함
 - 웹기록 관리도구, 보존기술 연구개발 및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 **(전자매체)** 전자매체 유형별 체계적 등록·관리방안 마련
 - 가인수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자매체 기록관리 적용
 - 매체별 등록·관리 지침 마련 후 확산
- **(디지털 파일)** 일괄 이관되는 대량·다종의 디지털 파일에 대한 중복 제거, 분류 및 등록 방안 마련
 - 대량, 다수의 디지털 파일 관리프로세스 수립 및 확산 방안 마련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2-2-4.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

□ 추진배경

- 시청각·간행물·행정박물 등 특수유형 기록이 업무 및 단위과제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이관됨에 따른 보존상 문제점 대두
- 시청각기록물 생산환경 변화(아날로그→디지털)에 따른 관리기준 미비로 주요 시청각기록의 생산정보 누락 및 보존·관리 곤란
- 간행물은 발간 후 등록업무를 각급기관 처리과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직접 신청하고 있어 기록관에서 간행물 관리 역할 미비
- 행정박물 업무별 상이한 서식 사용 및 행정박물 유형 분류와 관리 대상 선별 기준 미비로 행정박물 관리 효율성 저하

□ 추진목표

- 시청각기록·행정박물 관리기준 및 지침 개정('20년)
- 간행물 기록관리 체계 개선 및 시스템 개선('20년)

□ 추진내용

- **(지침 마련)** 시청각·간행물·행정박물 등 특수유형 기록이 기록분류 체계에 기반하여 생산·관리·이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재정립
※ 기록관리 단계별 세부 가이드 마련 및 관련 지침 개정
- **(시청각)** 시청각기록 관리단계별 적용가이드* 마련
* 선별·보존기간 책정(처리과), 평가·폐기(기록관) 등 단계별 기준 제시
- **(간행물)** 정부간행물 온나라시스템 메뉴 신설 및 RMS 관리기능 추가
※ 간행물 관리 기능 온나라-RMS-CAMS 상호 연계 추진
- **(행정박물)** 행정박물 관리서식 일원화, 유형별 관리대상 세부기준 및 선별가이드 마련

2-2-5. 기록 메타데이터 재설계 ㉔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록 생산·관리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의 시스템을 통한 생산·관리 의무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12항(정의), 제4조 4항(기록관리의 원칙)
-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생산되고 있으나, 전자문서생산시스템의 문서유형 중심으로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제정·운영
- 기록관리시스템별(RMS, CAMS 등)·업무별(기술, 재분류, 평가 등)로 메타데이터를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성 부족
- 기록물 전 생애주기 동안 메타데이터를 누락없이 관리하고, 진본성·무결성·이용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 재설계 필요

□ 추진목표

- 메타데이터 관리기준 수립 및 표준 개정(~'23년)
- 메타데이터 표준을 반영, 기록관리시스템(RMS, CAMS 등) 적용('23년~)

□ 추진내용

- **(현황 분석)** 각 기록물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생산·관리·활용 현황 및 국내외 참고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 ISO 23081 기록메타데이터, PREMIS 보존메타데이터, EAD 등
- **(표준 개정)** 기록유형별·업무단계별·메타유형별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 및 표준 개정, 업무* 간 체계적 생산·획득·활용방향 마련
* 정리·기술(기술서), 공개재분류(공개기준서), 보존기간 재평가(평가검토서) 등
- **(메타데이터 재설계)** 기록관리 단계별 메타데이터 재설계 및 마스터 테이블 작성, 기록관리시스템 적용모델 설계 및 반영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실행방안'(가칭) 연구용역 추진
- **(모니터링)**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기록물 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타데이터 누락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주체 : ㉔(기록관), ㉕(영구기록물관리기관), ㉖(국가기록원), ㉗(헌법기록물관리기관), ㉘(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전략 3〉은 현용·준현용 기록관리의 핵심인 각급 기관 기록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각급 기관의 기록관은 국가기록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록관의 권한 확대 및 조직체계 재설계, 기관 유형과 생산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기록물 장기보존 등 기록관의 기능 확장에 따른 인력·시설·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과제 》

3-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 ①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② 기록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3-2. 기관유형별 기록관리체계 개선

- ① 중앙·특별행정기관
- ② 지방자치단체
- ③ 교육청
- ④ 공공기관
- ⑤ 대학
- ⑥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 ⑦ 한시·폐지기관

3-3. 기록관의 인프라 확충

- ① 기록관리 조직·인적 기반 확충
- ②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확충
- ③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3-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 ▶ 기관 유형 및 생산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태점검·컨설팅·기관평가 등과 연계하여 상시 지원·점검

3-1-1.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 추진배경

- 기록관은 매년 '기록관리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록관 운영과 연간 수행할 기록관리 업무로 한정
- 각급 기관 기록관의 자율적·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관별 고유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추진목표

- 기관 기록관리 기본계획 참조모델 마련 및 시범적용('20년)
- 각급 기관 기본계획 시범 수립('20년) 및 확산·시행('21년~)

□ 추진내용

- **(추진절차)** 참조모델 및 작성지침 마련(국가기록원) → 기본계획 수립·시행(각급 기관) → 협의·조정·지원(국가기록원, 각급 기관) → 이행결과 제출(각급 기관) → 모니터링 및 개선 지원(평가 및 실태점검과 연계)(국가기록원, 각급 기관)
- **(참조모델 마련)** 기관 기록관리 기본계획 참조모델(안) 마련
※ (내용) 기관 기록관리 법적 의무, 기록관 조직체계 및 인적 구성, 시설·인프라, 교육 등
- **(계획 수립·시행)** 기록화 대상 선정, 평가 정책, 보존·서비스 정책 등이 포함된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포함
- **(정책 및 전략 마련)** 기관별 기록관리 여건과 기록 이용자를 고려하여 장기적 기록관리 정책 및 전략 마련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1-2. 기록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

□ 추진배경

- 새로운 기관평가 개선안을 '21년부터 시행예정*으로, 기관 유형과 현황을 고려한 수준별 기관평가에 대한 요구 수용 및 서면평가 한계 등 보완 필요 * 평가체계나 평가지표 개선안이 현행 평가체계와 유사함
 - 기관평가 미흡기관 위주의 실태점검·컨설팅 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실시 미비
 - 실효성 있는 기관평가 및 실태점검 실시로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환류체계 마련으로 기록관리 발전 기반 조성 필요
- ※ 3-1-1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연계 추진 필요

□ 추진목표

- 기관 특성·환경 등을 고려한 수준별 기록관리 평가 시범 운영('23~'24년)
-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 실태점검 확대(2%→60%, ~'24년), 매년 지방자치단체 10개 기관 점검('20년~)

□ 추진내용

- **(기관 역량 강화)** 기록관리 정책(기본계획)과 현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평가·실태점검 운영으로 기관 기록관리 수준 제고
 - **(평가제도 내실화)** 기록관 설치·운영 형태 등 기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평가방식을 지속 개선하여 기록관리 현황 모니터링 강화
- ※ 평가단위 조정(현행 기록관 단위 ⇒ 개선 공공기관 단위) 및 기관유형·특성 등을 반영한 수준별 평가('23년~)
- **(실태점검 확대)** 정부산하 공공기관, 사립대학 및 정부합동감사에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단계별 실태점검·컨설팅 확대
- ※ 효율적인 실태점검을 위한 기관유형별 실태점검표 및 업무매뉴얼 개발
- **(공정 환류)** 유공 포상 제도의 공정한 운영, 우수사례 공유 제도화, 미흡기관의 실태점검 및 컨설팅 강화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 기관유형별 기록관리체계 개선

- ▶ 기관 유형별 기록관리 여건과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발굴 및 맞춤형 지원

3-2-1. 중앙·특별행정기관 [기국]

□ 추진배경

- 중앙·특별행정기관은 행정부 핵심업무를 증명하는 중요 기록물의 생산주체로서, 공공기관 기록관리 업무의 수범기관* 역할 수행
* 전문요원 배치(97.8%), 시설·장비구축(99.5%), 기록관리시스템 운영(100%) 등
- 중앙·소속기관 간 병렬적 지위관계의 비효율성, 기록관 자체보존 대상 기록물 확대 등에 따라 기록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필요

□ 추진목표

- 기록관 체계 개편 및 관련 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23년)
- 자체보존 대상 기록의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및 가이드 마련('21년)

□ 추진내용

- **(중앙·특행 체계 개편)** 행정적 위계구조를 감안하여 본부와 소속기관 기록관 관계 및 특성 점검, 기록관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중앙-소속기관 간 관계 재설정, 기록관 요건 조정, 전문인력 배치 모형(안) 제시 등
- **(자체보존 제도 정비)** 동종대량 기록 등 기록관 자체보존 관련 제도의 실효성·타당성 검토 및 개선안 도출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방법, 평가·폐기 프로세스 등 종합 검토
- **(이관연장 내실화)**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물 재연장 사유의 구체화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추진
※ 군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 총 6개 기관 비공개기록물 보유현황 파악 등 컨설팅 실시

추진주체 : [기국],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2. 지방자치단체

□ 추진배경

- 지자체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보류('08년)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대상 기록을 지자체 기록관에서 자체 관리 중

※ 기초자치단체 보존기간 30년이상 비전자기록 보유현황('19년 기준) : 약 1,100만 권

총계 (권)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32,314,580	5,173,429 (16.0%)	4,798,321 (14.8%)	1,017,929 (3.1%)	4,602,834 (14.2%)	13,097,073 (40.5%)	3,274,666 (10.2%)	350,328 (1.1%)

- 지방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08년 이후 지자체 기록관리에 대한 지원은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기록물 생산현황 관리, 정부합동감사 등 제한적 수준에서 진행

□ 추진목표

- 지자체 기록 관리를 위한 대책 및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21년)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표준화(~'22년)

□ 추진내용

- **(현황 분석)** 지자체 기록관리 현장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법령·제도·프로세스와의 정합성 분석·검토
 ※ 서면·방문조사, 컨설팅, 업무협의회 등 적극 활용
- **(제도 개선)** 광역지자체에 대한 아카이브 권한 부여 및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기록관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발굴·정비
-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광역·기초 단위 생산기록물의 유형·특성 분석 후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표준화 추진
 ※ 광역지자체 단위과제 보존기간 정비사례 참고(기관공통 및 위임사무 중심)
- **(모범사례 확산)** 지자체 기록관리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
 ※ 지방행정기관 기록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21년)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3. 교육청 [국]

□ 추진배경

- 교육기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관심 증대
 - ※ 학교 및 유치원 운영 비리 등을 계기로 교육기관 운영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 대두
- 교육청은 타 기관유형에 비해 기록관리 인프라(인력·보존서고 등)가 취약하며, 교육행정기록에 대한 현황 및 조사분석 미흡
 - ※ 중앙 및 지자체 전문요원 배치율이 97%이나, 교육청은 62% 수준
 - 기관평가 분석 결과, 전문요원 배치율과 기관 기록관리 수준이 비례함 (교육지원청 중 전문요원 배치기관 평균 83.7점, 미배치기관 평균 43.5점)
- 교육청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교육행정기록의 정책·제도·프로세스 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필요

□ 추진목표

- 교육행정기록 제도 및 프로세스 정비(~'21년)
- 교육청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 완료(~'24년)

□ 추진내용

- **(인프라 확충)** 기관장 면담, 기록관리 기관평가 연계 등을 통해 법정 인력배치, 시설·장비 확충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촉진
- **(현황 분석)** 교육청 기록관리 현장에 대한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법령·제도·프로세스와의 정합성 분석·검토
 - ※ 서면·방문조사, 컨설팅, 업무협의회 등 적극 활용
- **(제도 개선)** 교육행정기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제도 정비
 - ※ 처리과 단위(각급 학교), 교육청과 지원청·지자체와의 관계, 보존기간 기산일, 보존기간, 기록 유형 등
- **(프로세스 개선)** 학교 기록물관리 지침 정비(특수유형 기록물, 학교 기록물 이관 등), 나이스 기록관리 지원 등 공동현안 대응

추진주체 : [국](기록관), [영](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현](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4. 공공기관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기록관 설치(11%)와 전문인력 배치(44%) 저조 등 기록관리 부실로 대국민 신뢰도 및 투명한 행정구현에 애로

※ 공공기관 대상기관 현황

합계	1호 (기획재정부 고시 기관)				2호 (지방공사공단)	3호 (특수법인)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공공기관		
624	340	36	95	209	151	133

* 주요 업무유형: 사회간접자본, 금융, 에너지, 보건, 문화예술, 시설관리, 도시개발 등 다양

-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제도 및 절차 미비

□ 추진목표

- 공공기관 관련 체계 전반 정비(~'24년)
 ※ 유형별 기록관리 모델 확립, 기록관 기능 재설계(아카이브 기능 포함)
- 직접관리기관 지정 확대('21년)

□ 추진내용

- **(체계 확립)**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 기록관 체계 정립을 통해 아카이브 기능을 병행하는 공공기관의 표준 기록관 모델 제시
 - 공공기관의 보존기간 책정 준칙 및 분류체계 모델 개발
 - 공공기관 유형분류를 통한 그룹별 지원방안 마련
- **(직접관리기관 확대)** 공공기관 기록관리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직접관리기관 지정 확대 및 운영제도 정비
- **(기반 강화)** 기록관 설치, 전문요원 배치 등 인프라 강화 및 기관장 인식개선 등을 통한 기록관리 수준 제고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5. 대학

□ 추진배경

- 대학 학사행정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기록관리 필요성 확산
 - ※ '19년 동양대 포상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 및 연세대 입시 기록 분실 등 논란 발생
- 대학 기록관은 아카이브 기능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나, 기록관리 인식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시급한 개선 필요
 - ※ 특히, 전체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사립대(300개)의 기록관 설치 비율은 18%(17개)로 국·공립대 전체 52개 중 82%(41개)에 비해 미비한 수준임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대학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 ※ '18년 4개교, '20년 4월 현재 총 16개교, '21년까지 70여 개교 예상

□ 추진목표

- 대학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체계 구축(~'22년)
- 폐교대학 기록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 마련(~'22년)

□ 추진내용

- **(체계 확립)** 대학 기록관리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체계 확립
 - 국립대/사립대별 특성 및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여 지침 마련
 - 대학 생산기록의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 제공
 - 기록관 및 아카이브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 및 프로세스 확립
- **(폐교대학 기준 마련)** 폐교대학 기록물의 누락없는 관리·보존을 위해 기록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 마련
 - *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에 따라 폐교대학 기록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20.3월)된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력체계 구축 포함
- **(대학 기록관 협력체계 강화)** 대학 기록관리 자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기록관 협력체계 구축 및 컨설팅 활성화

3-2-6.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

□ 추진배경

- 대통령 임기 단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누락 없는 대통령기록 이관을 위한 기록관리 체계 개편 필요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한시기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필요

□ 추진목표

- 생산기관 인력, 정보화 지원, 기록관리업무 체계 정립('20년)
- 기록관 설치 의무대상 기관 기준 등 대통령기록물법 개정('21년)

□ 추진내용

- **(생산기관 기록관리체계 정립)**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규모, 존치 기간, 기록물 이관량 등 분석을 통해 기록관 설치 의무대상 정비
 - 기록관 미설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지원 범위 및 방법 재정립
 - 생산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분류체계 등 정비, 지원
 - 생산기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확보 및 대통령기록관 파견인력 지원
- **(이관체계 마련)** 임기종료 후 생산기록물을 전량 이관하는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체계 구축
 - 생산 후 기록관 관리시점부터 철저한 이관 기반 마련
- **(시스템 고도화)** 대통령 기록관리 정보화 지원체계 마련
 - 이관파일생성기, 행정정보데이터관리, SNS수집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기록관리 기반기술 지속적 고도화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2-7. 한시·폐지기관

□ 추진배경

- 한시(폐지)기관은 대부분 특정 목적으로 설립된 소규모 조직으로, 기록관리 인식 및 전담인력 배치 미흡
 - ※ 현재 활동중인 한시(폐지)기관 11개 기관 중 기록원 직원 파견 2개 기관(‘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외에는 전문요원 없음
- 한시(폐지)기관의 설립목표에 부합하는 기록물의 생산과 이관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기록관리 체계 마련 시급
 - ※ 현행 한시(폐지)기관 관련 지침(2005) 및 표준(2012)의 현행화 필요

□ 추진목표

- 「한시(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표준 개정(~'21년)
- 한시(폐지)기관 기록관리 지원체계 정비(~'21년)

□ 추진내용

- **(지침·표준 개정)** 한시(폐지)기관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록관리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및 표준 개정
- **(지원체계 정비)** 한시(폐지)기관 기록관리 지원체계 마련
 - 설립 초기부터 기록관리 컨설팅 강화 및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
 -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배치 및 파견 등 지원방안 마련
- **(생산 및 이관체계 정립)** 한시(폐지)기관 생산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이관 및 활용방안 마련
 - ※ 지금까지 한시(폐지)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과 조직을 분석하여, 이후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 설립되었을 때 생산되어야 할 중요기록물의 유형 제시 및 결락 방지

3-3 기록관 인프라 구축

- ▶ 기관 기록관리 전담조직으로서 기록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및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3-3-1. 기록관리 조직·인적 기반 확충 ㉠㉡

□ 추진배경

- 기록관 설치의무 대상기관은 기관의 유형·규모 등에 관계없이 1개의 단일기록관을 기록물관리부서에 설치·운영
- 기관 규모 및 업무량과 상관없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인 전담 체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채용 및 미배치 문제 발생
 - ※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 등의 전문요원 배치율이 아직 저조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임기제 등 비정규직 채용 비중 높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19.12. 기준)

구분	총계	중앙	중앙 소속	군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
대상기관	1,476	48	135	119	17	228	17	176	496	240
배치기관	900	48	131	54	17	222	17	110	237	64
배치율	61%	100%	97%	45.4%	100%	97.4%	100%	62.5%	48%	27%

- 기록 생산·등록 등 처리과 기록관리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형식적 지정으로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한계 노정

□ 추진목표

-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지침 마련(’20년) 및 모범사례 발굴(’22년)
- 기록관 인력 배치기준 및 구성모델 마련(~’21년)
-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관련 입법화(’21년)
- 기관별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하여 기록관리 조직·인력 확충(~’24년)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추진내용

- (기록관 조직) 통합, 복수기록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관 운영 모델 마련 및 기록관 통합 설치·운영 지원
 - ※ 기록관 설치 관련 시행령 제10조 개정('20.3.)에 따른 유형별 운영모델 마련 필요
- (인력 배치기준) 각급 기관이 전문요원 정원 확보 시 참고 가능한 기록물관리기관의 인력모델 및 배치기준 마련, 단계적 증원 추진
 -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유관분야 인력 포함(시스템, 보존, 활용·서비스 등)
- (전문요원 배치 확대)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 등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속적 확대 및 정규직화
- (처리과 책임 강화) 처리과의 장 및 기록물 생산자의 책임·역할, 기록물 관리책임자 규정 등 정비

3-3-2.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확충 ④

□ 추진배경

- 동종대량 기록 등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장기보존 하게 됨에 따라 기록관 보존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적 확충 필요
 - ※ 중앙·지자체·교육청 기록관 보존서고 구축은 99.7%로 높으나, 보존환경·장비 분야에 미흡기관 존재

□ 추진목표

- 기록관 보존시설·장비 관련 법령·표준 개정(~'22년)
- 기관별 규모 및 생산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시설·장비 확보(~'24년)

□ 추진내용

- (표준·지침 마련) 기록관의 시설·환경 표준 개정 및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제공
- (기술지원 강화) 기록관리 지원, 기관평가·점검 업무와 연계하여 보존 시설·장비 구축 및 보존환경 관리 등 컨설팅 실시
- (시설·장비 확충) 동종대량, 비치기록물 등 기관별 장기보존 기록물 규모를 고려하여 보존시설 및 장비 확보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3-3-3.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 추진배경

- '06년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새로운 기록환경 반영의 한계로 인해 전자기록물 이관 및 보존 과정에서 기능 미비, 이용자 불편 지속
 - ※ '19년 온·나라→RMS 이관 소요 일수 : 평균 27일(기록물 양 등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
- 중앙부처는 CRMS로 전환하였으나, 지자체 등은 RMS2.0 운영 중으로, 지자체·교육청 등의 전산환경을 고려한 CRMS 전환가이드 미비
- 새로운 기록관 유형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대학 등 아카이브 기능 보유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와 확산 필요
 - ※ 624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중 표준RMS 도입 34개('19년 말 기준)

□ 추진목표

- 차세대 RMS 구축(중앙부처 ~'22년, 지자체·교육청 ~'24년)
- 정부산하 공공기관용 RMS 구축 및 확산(~'22년)

□ 추진내용

- (차세대 RMS)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 강화
 - 차세대 RMS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스템 재설계, 구축 및 확산
 - ※ 지자체·교육청 기록관리시스템 포함
- (신기술 반영)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및 지능형 기록관리서비스 도입
- (공공기관용 RMS) 공공기관, 대학 등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아카이브 기능 포함) 및 구축
 - ※ 공공기관 표준시스템 보급방식, 인증제 등 다양한 도입방식 검토 병행
- (CRMS 확산) 클라우드 온나라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전환을 위한 가이드 수립 및 운영 지원
 - ※ 지자체·폐쇄망기관 등 CRMS 전환 시 기술 지원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전략 4〉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각급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가기록관리체계 내에서 헌법·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능·업무의 자율성 강화,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로 소장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보존체계를 정립하고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 추진과제 》

4-1. 영구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 ①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대통령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 ③ 헌법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 ④ 지방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4-2. 국가 중요기록물 관리·보존체계 확립

- ①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 ②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 및 이관체계 개선
- ③ 기록물 안정적 보존기반 구축
- ④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확립

4-1

영구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기록관리 위원회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기관 유형 및 기록 특성을 고려한 아카이브별 핵심과제 발굴·시행

4-1-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추진배경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등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정체성 확보 및 역할 정립 필요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설치가 부진(서울, 경남만 설치·운영 중)하여 지자체 기록관리 부실 우려
- 국가기록관리체계 내 역할과 보존 분담에 기초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추진목표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20년~)

□ 추진내용

- **(모델 마련 및 확산)** 기본계획 수립 범위·절차, 지침 및 모델 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공유·확산
 -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포함) 시범 수립 등 가이드 역할 수행
- **(사명·목표 명확화)** 국가 중요기록물을 영구보존하는 아카이브로서 사회적 역할에 기반한 사명 및 목표 설정
- **(기본계획 수립)** 국가·헌법·지방행정·교육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록관리 기본업무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 포함
- **(이행 점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보고 및 이행실적 제출·점검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1-2. 대통령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 추진배경

-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여건이 열악*하여 철저한 생산 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의 특성(5년 주기 대량이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보존 업무프로세스 미흡
 - * 23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전문요원 배치 기관은 3개 기관(민주평통 등)에 불과
- 대통령기록물 보호·관리의 핵심인 지정기록물 제도는 운영 초기부터 국회·검찰에 의해 열람되는 등(총 10회) 안정적 제도운영 위협
- 대통령기록관리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추진목표

- 지정기록물 제도 등 대통령기록물법 일체 정비(~'21년)
-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개편('22년)

□ 추진내용

- **(체계 개편)** 대통령기록관리 생산·관리·보존·열람 전반의 제도 개선 및 체계 개편 추진
 - ※ 현행 제도 진단 평가,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국회 공청회 등 지평 확대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지정기록물 제도 정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보완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검찰에 의한 열람요건 강화 및 열람 후 회수·과기 절차 개선 등
 - 전직대통령 및 전문연구자의 접근·열람 편의성 강화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생산·관리체계 강화)** 대통령기록물 특성에 맞는 생산·관리체계 마련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대통령기록물 특성을 반영한 보존기간 구분 및 책정기준 마련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1-3.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조직체계 구축

□ 추진배경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은 입법·사법·선관위에 설치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3권분립에 의거 독자적인 기록관리 영역 구축 중이나,
- 인력, 조직, 시설 등 기록관리 기반 미흡으로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및 전국단위 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
 - ※ 국회를 제외하고는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기반이 미흡(팀 단위 조직, 전국 단위 소속기관 기록관 미설치 등)
- 입법·사법·선거기록의 관리·보존기관으로서 헌법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역할 정립 및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급

□ 추진목표

-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조직체계 구축 및 기록관 설치단위 현실화(~'24년)
- 헌법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20년~)

□ 추진내용

- **(조직체계 구축)** 아카이브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규모·업무량을 기준으로 조직체계 마련 및 전문인력 배치
 - ※ 전국단위 조직의 경우 기록관 설치 병행 추진(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
- **(기능 정립)** 입법·사법·선거기록이 적법하게 이관·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체계 구축 및 특화 기록에 대한 서비스정책 마련·시행
- **(협의체 구성)** 헌법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록물관리기관 간 균형발전 및 현안·정책 협의, 상호지원 추진
- **(모니터링 강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참여 및 역할 제고를 위한 심의*·보고 등 강화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승인 및 비공개기간 연장,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1-4. 지방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국지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07년) 시 광역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설치가 미흡하여 지자체 기록관리 부실 우려
 - ※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남만 설치 운영 중
- 미설치 15개 시·도의 설립 및 기 설립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추진목표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22년)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확대 및 운영 안정화(~'24년)

□ 추진내용

- **(지방기록정책 수립)** 광역시·도의 자율적인 지방기록원 설립·운영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기록관리 기본정책 재검토
 - 지방기록관리 성격 정립 및 관련 법령 정비(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
 - 장기적 설립 지연기관에 대한 대안모델 개발
 - ※ 인프라 구축 전이라도 아카이브 기능·역할 가능하도록 권한부여 등
- **(설치 확대)** 지방기록원 설치 확대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 모색
 - 민·관(중앙·지방)·학 연계 지방 기록문화 확산 추진
 - ※ 시·도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지방기록원 설립 필요성 인식 제고
 - 지방기록원 설립 초기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등
- **(운영 안정화)** 기 설립된 지방기록원이 기록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정비 및 지방기록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 강화
 - ※ 시·군·구,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민간 영역과의 관계 정립 등 업무 조기정착 추진
-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기능·역할 및 보유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주체 : 국(기록관), 영(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현(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지방기록물관리기관)

4-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관리체계 확립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소장기록의 분석을 통한 이관체계 마련, 지적 통제, 장기보존 등 국가 중요기록의 관리·보존체계 구축

4-2-1.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 추진배경

- 동일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정부조직 변천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어 기록정보 관리·활용 곤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고유의 분류체계 없이 기록의 내용분석을 업무별 중복수행으로 업무효율성 저하
- 정리·기술, 공개재분류, 보존기간 재평가 등 영구기록관리 업무과정에서 소장기록물의 체계적 구조화를 통해 기록정보 지식자원화 필요

□ 추진목표

- 영구기록물 분류체계 마련('20년)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21년)
- 지능형 기술정보 구축 및 소장기록 지적통제 가이드 도출(~'24년)

□ 추진내용

- **(분류체계 마련)**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분류체계 마련 및 적용
※ 정부조직변천 및 기능분류체계 분석을 기반으로 소장기록물 정리체계 재정립
- **(지적통제 추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기록물의 지적 통제를 위해 정리·기술, 공개재분류, 보존기간 재평가 등 업무의 연계구조 강화
※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록물분류 자동화 및 지능형기술 방안 마련 포함
- **(기술정보 구축)** 기록물 가치평가 기반의 기술정보 구축 및 서비스 지원기능 강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장기록 지적통제 가이드 마련
※ 학술·연구자를 위한 검색·리서치 가이드 및 전거레코드, 시소러스 보완 등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2-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 및 이관체계 개선

□ 추진배경

- 기관의 이관 희망목록 위주로 이관대상을 협의·결정하고 있어 기관 제출목록 의존도가 높고 중요기록물의 결락여부 확인 곤란
- 기관별 핵심기록물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관협의 시 적극 제시하는 등 중요기록물 중심의 이관이 이뤄지도록 업무방식 개선 필요
- 동일한 맥락으로 생산된 전자·비전자 기록이 연계정보 없이 별도로 관리·이관되고 있으므로, 기록분류체계에 따라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필요

□ 추진목표

- 기관 고유기능·기록물 분석, 주요기록물 종류 유형화(~'21년)
- 기관별 중요기록물 선별이관 실시('22년~)
- 기록물 통합 관리체계 구축('20년~) 및 통합이관 실시('21년~)

□ 추진내용

- **(중요기록물 선별이관)** 고유기능별 중요기록물 파악을 통한 선별이관
 - 기관 조직연혁 변천, 기록물 생산현황, 소장기록 분석 등을 통하여 기관에서 이관받아야 할 핵심기록 및 결락여부 파악·유형화
 - 역사적 가치 및 관리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관 자체보존 기록 제시
 - 기관별 이관대상 중요기록목록 축적 후 매년 이관협의 시 적용
 - **(전자·비전자 통합이관)** 기록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전자·비전자 기록의 연속적·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 전자·비전자 기록을 기록분류체계에 기반한 통합이관 추진
 - 기록물 통합이관 지침 시행, 세부 인수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 기능 정비, 기록물 정리·등록 방안 마련 등
- ※ 비전자기록 실물 추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합이관 점진적 확대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2-3. 기록물 안정적 보존기반 구축 국영

□ 추진배경

- 기록환경과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기록물 대체수록, 이중보존, 재난관리 등 보존 분야 관련 법령·지침 개선 필요
- 국가 중요기록물의 후대 전승을 위해 보존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강화 및 관련 기술 지속적 연구개발 필요
 -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 대폭 증가
'07년 155만권(문서), 178만점(시청각) → '19년 421만권(문서), 546만점(시청각)

□ 추진목표

- 대체수록 및 대체보존, 이중·분산보존 기준 등 법령 정비('21년)
-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보존시설 및 장비 확충(~'24년)

□ 추진내용

- **(제도 개선)** 보존·복원 관련 기술환경의 조사·연구를 통한 제도 정비
 -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대체수록 및 대체보존, 이중 분산보존, 장기보존용 전자매체 요건 등에 대한 추진방향 마련 및 제도 개선
- **(보존시설 확충)** 국가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기관별 보유기록 규모에 적합한 보존시설·장비 확충 추진
 - ※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관리 보존·복원 처리, 교육·견학·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하는 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보존인프라 구축 지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인프라 구축 지원
 - 보존시설 관련 선진사례·기술 조사를 통한 현행 표준 정비 및 업무매뉴얼 등 개발하여 보급, 건립 전 과정 컨설팅 지원

4-2-4.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확립 ㉠

□ 추진배경

- 전자기록 장기보존에 대한 기본정책이 부재하여 기록유형별 전자 기록의 포괄적인 관리와 보존에 한계 노정
 - ※ 단일 보존포맷(PDF/A-1)·장기보존패키지(NEO) 변환 정책만 존재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을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용함으로써 인해 각 기관 특성 및 생산기록 유형에 적합한 보존방식 적용 불가
- 전자기록의 장기간 보존 시 재현이 가능하도록 기술정보 관리 필요
 - ※ 공공기록물법 제20조(기술정보 수집) 개정, 제20조의2(기술정보 관리) 추가

□ 추진목표

- 기록유형별 보존포맷 기준 수립·권고포맷 제시(~'21년)
- 전자기록 기술·표현정보 관리체계 구축(~'24년)

□ 추진내용

- **(장기보존 기본정책 수립)** 보존방식 다양화 및 기관 자율성 부여
 - 기록유형별(문서, 데이터세트, 시청각 등) 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패키지 방식 다양화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전자기록 장기보존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보존정책 전환
 - ※ 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이 기준 및 권고포맷 제시
 - OAIS 참조모형에 따른 디지털 아카이브 기반 마련
- **(기술·표현정보 관리)** 전자기록 장기보존 시에도 재현이 가능하도록 기술·표현정보 관리체계 구축·활용
 - ※ 장기보존에 취약한 파일포맷 등에 대한 대안 마련
- **(협업체계 구축)** 디지털 자원 장기보존 관련 기관과의 지식·경험 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 레거시 포맷 보유기관 협의체 구성, 관련 분야 포럼 개최, 공동 연구 진행 등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전략 5〉는 국가기록관리 진흥을 위해 종전 공공기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관리 유관기관 및 민간, 학계, 산업계 등이 연대·협력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록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급 기록관리 단체들과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민간 아카이브 운영과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기록관리의 총괄·조정 및 기본정책 수립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추진 과제 》

5-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 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 ②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계획수립·이행점검 및 제도화
- ③ 기록관리 네트워크 다각화 및 협력 강화
- ④ 민간 아카이브 지원·협력체계 구축
- ⑤ 기록관리 학·협회 및 유관 단체 교류·협력 확대
- ⑥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지원

5-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할 강화

- ① 국가기록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독립성 확보
- ② 공공기록물법 체계 개편
-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 ④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강화
- ⑤ 국가기록관리 교육 기반 강화

5-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록관리 유관기관, 민간·학계·산업계와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구체화

5-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 추진배경

- 「공공기록물법」에서 규정한 안전* 위주의 운영으로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역할 미흡
 - * 표준 제개정, 기록관리 평가, 비공개기록물 공개·이관시기 연장, 국가지정 기록물 지정 등 법정 심의·보고사항이 전체 안전의 93.2% 차지
- 국가기록원 이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책 심의·자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록 관련 사회적 쟁점 대두 시에도 대응 미흡

□ 추진목표

-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 확대('20년~)

□ 추진내용

- **(위상 정립)** 국가기록관리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기구로서의 위상 정립
 - 기록관리 정책 현안 조정 기능 강화
- **(협력 강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업무 조정 및 협력
 - 입법부·사법부기록관리, 대통령기록관리, 지방기록관리 등의 분권적 추진 중 상호 조정·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기능 강화
- **(역할 확대)** 심의 사안 확대* 및 민간기록 포함 심의 범위 다변화
 - * 기록관리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기관간 또는 시민사회와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기록물 유실과 파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5-1-2.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계획수립·이행점검 및 제도화 ㉔

□ 추진배경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계획* 간 상호 연계성 없이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실행방안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도 부재

*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06년),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09년), 중장기 업무계획('13년) 등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업무의 일관성, 지속적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국가기록관리 정책 개발 및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추진목표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전략 및 계획 수립('20년), 운영(~'24년)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제도화(~'21년)

□ 추진내용

- **(중장기계획 제도화)** 국가기록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시행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에 제도화
 - 중장기계획 수립 주체·주기·내용, 각급 기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제출 등 이행점검체계 규정
- **(계획수립·운영)**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운영
 - ※ 5년 단위 계획 수립 및 조정, 이행실적 상시 점검, 환류체계 마련 등
- **(제도개선 발굴)** 기록관리 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5-1-3. 기록물관리기관 네트워크 다각화 및 협력 강화 ㉔

□ 추진배경

- 국내외 기록관리 유관기관 간 협력 활동이 단발성 행사(협약식)로 그치는 등 구체적 협업 또는 환류체계 미흡
 - ※ (국가기록원) 국내 유관기관과 기록관리 업무협약 총 67개 기관, 58건 체결
- 국가기록관리 차원에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간 유기적 협조와 상호교류를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
- 공공·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관련 단체·기관 등과 네트워크 다각화 필요

□ 추진목표

- 국내외 유관기관 업무협약 확대('21년) 및 협력 강화(~'24년)
- 기록물관리기관 정책협의체 구성('21년) 및 운영(~'24년)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20년) 및 운영 지원(~'24년)

□ 추진내용

- **(교류 확대)** 국내외 협력·연계 대상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확대
 - 각 협력대상·그룹별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협력아젠다 도출, 정례적 협의체 운영, 분야별 협업·지원체계 가동
 - 국내외 업무협약(MOU) 내실화 및 실질적 협력 강화
- **(협의체 구성)** 민·관·학 파트너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기록관 협의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민간 아카이브 협의체 등 구성·운영
 - ※ 국가차원의 일원적 정책방향 유지, 기록관리 현안 협의·조정 등을 통한 상생 협력 강화
-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과 재단·사업회간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소장 대통령기록물 체계적 보호 및 대통령기록문화 확산
- **(국제협력)**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안정적 설립 및 운영 지원, ICA·분야별 국제협력 파트너 발굴 및 협업 추진

5-1-4. 민간 아카이브 지원·협력체계 구축

□ 추진배경

- 공동체, 예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아카이브가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설립현황 등 기본정보 파악조차 미흡
- 「공공기록물법」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 필요
- 민간 아카이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기록자산 확보 및 활용기반 마련

□ 추진목표

- 민간 아카이브 현황 조사('20년) 및 협의체 구성·운영('21년~)
- 민간 아카이브 기록 등록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23년)

□ 추진내용

- **(현황 조사)** 아카이브 유형(기업, 공동체 등) 및 주제별(인권, 예술 등) 설립·운영현황 등 기초 조사 실시
- **(협력체계 구축)**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민간 아카이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협력방안 모색
 - ※ 관련분야 활동가·연구자의 경험치 공유 및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마련
- **(지원방안 마련)** 민간 아카이브 소장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지원
 - (제 도) 민간기록물 보존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 (인프라) 기록물 등록, 정보(소장정보 등) 공유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보급, 표준 메타데이터 개발 등
 - (보 존) 맞춤형 복원·복제, 기록관리 교육(정리·보존 등)
- **(민간기록자산 공유)** 민간 아카이브 기록의 공유·활용방안 마련
 - 아카이브맵·아카이브 소장 컬렉션 등록부 구축 및 국가기록포털을 통한 서비스 방안 등 검토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5-1-5. 기록관리 학·협회 및 유관 단체 교류·협력 확대 [한계][국]

□ 추진배경

- 기록관리 관련 학·협회, 유관 분야 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성 융합 및 기록학 내실화 도모

□ 추진목표

- 학술단체와 간담회 정례화 및 연 1회 공동 학술회의 개최('20년~)

□ 추진내용

- **(기록관리 단체)** 기록관리 학·협회 등 학술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정례화, 공동연구 확대 및 성과 공유
 - ※ 학·협회 정기 간담회, 정책포럼 공동 개최 등
- **(유관분야 기관·단체)** 역사학, 행정학, 정보학 등 유관 분야 단체와의 교류기반 마련으로 기록관리 저변 확대
 - ※ 주기적 간담회를 통한 주요 이슈 및 기술 동향 공유, 공동사업 기획·추진

5-1-6.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지원

□ 추진배경

- 국가기록원 주도의 기록관리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록관리 산업 생태계 약화
- 새로운 기록관리 기술 개발, 시스템 구축 등에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기록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추진목표

- 간담회 및 기록관리 업계 전문가 연구모임 개최('20년~)

□ 추진내용

-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R&D, 정리·등록, 보존복원 분야 등 기록관리산업계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기록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 지속 발굴 및 정보 공유로 기록관리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참여기회 확대
- (신기술 공유) 기록관리 관련 신기술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시범 적용 등을 통해 기록관리 기반 내실화

※ 기록관리 업계 전문가 초청 연구모임 및 릴레이 세미나 등 추진

5-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위상 강화 및 역할 재정립

- ▶ 기록물관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 기능 및 역할을 과제화하여 추진

5-2-1. 국가기록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국

□ 추진배경

- 입·사법부, 행정부, 민간 영역 등의 기록관리를 총괄 조정, 관리·지원 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조직 위상 정립 필요
 - ※ ‘NLL 남북대화록(’13년)’,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권한(’17년)’ 등 그간 국가 기록관리의 전문성,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 발생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 재정립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운영정책 강화 필요

□ 추진목표

- 국가기록원 기능 개편(’20년) 및 전문직 인사운영제도 시행(’21년)
- 조직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2년)

□ 추진내용

- **(기능 개편)** 기록관리 전반의 정책 수립, 총괄 조정과 기록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기능 재조정 추진
- **(위상 강화)** 독립외청·합의제 행정기관 등 독립성 확보·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위상 강화방안 검토
 - ※ 『공공기록물법』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를 개정하여 차관급 이상의 기구로 위상을 격상하는 법령 개정 검토·추진
- **(인사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서직 인사방안 마련·시행
 - 전문직에 적합한 성과평가제도 정착, 직렬별 특성을 반영한 보직 관리 등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기준 마련

추진주체 : 국(기록관), 국(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국가기록원), 국(헌법기록물관리기관), 국(지방기록물관리기관)

5-2-2. 공공기록물법 체계 개편 ㉠

□ 추진배경

- 국가기록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그간의 「공공기록물법」 입법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현행 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중심의 법률 설계, 문서형 기록 위주의 기록관리절차 등
- 기록관리 관련 타 법령과의 관계 및 기록물법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등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법미비사항 고려하여 전반적 개선 필요

□ 추진목표

- 공공기록물법 체계 개편안 마련(~'22년) 및 개편('23년)
- 표준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1년) 및 시행(~'24년)

□ 추진내용

- **(현행법 분석)** 성과 및 문제점, 환경요인, 입법미비사항 등 분석
 - (법체계) 법·시행령·시행규칙 체계, 장별 내용 등 정밀분석
 - (타법과의 관계) 전자화 등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 지방분권 등 행정 환경의 변화 포함하여 기록관리를 둘러싼 환경요인 분석
 - ※ 전자문서의 작성, 성립 및 효력 등(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공공데이터법), 전자화 문서 효력 및 보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보호법) 등
- **(개편안 마련)** 법체계 정비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 공론화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후 개편안 확정
 - ※ '19년 정책연구용역 결과 참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① 법체계 정비, ② 권력분립체계 및 지방분권화 반영, ③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④ 기록물 공개 및 활용 확대, ⑤ 대통령기록물법과의 관계 정립, ⑥ 진흥법체계 도입 등

- **(전부개정 추진)** 전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입법절차 추진
- **(표준 마련)** 표준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다양한 기록관리 환경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표준 제·개정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5-2-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국

□ 추진배경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도입('99년) 후 20년이 경과하고, 급변하는 기록관리 환경 내에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
 - ※ 자격 취득 현황('19.8월말 기준) : 총 2,383명 (대학원 1,864명/교육원 254명/시험 265명)
-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로 제한하고 있어 기록관리 디지털 환경 변화 등 업무 현장의 능동적 대응에 한계
-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질적 제고 및 전공 분야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필요
 - ※ (25개 대학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공통기준 부재로 학교별 개설 교과목 편차 발생(1~48과목), 기록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과 편성 미약(7개 대학 전자기록 관련 교과목 미편성)
 - (3개 교육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전문요원 시험 필수 과목 중심의 편성으로 기록관리 관련의 균형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 기회 제한

□ 추진목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과정 정비('22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21년)

□ 추진내용

- (양성과정 개선) 대학원 및 교육원의 교육과정 질적 개선으로 업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배치 도모
 - (대학원) 객관적 인증·공표 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공통기준 검토
 - (교육원) 교과(IT 분야 과목, 실습 등) 확대 편성 검토
- (자격제도 정비)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 등에 부합하는 전문영역 자격요건 확대를 통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강화
 - 자격시험 방식·내용 개선, 전공요건 확대 등 자격제도 정비
 - ※ 정책연구용역 추진 및 자격요건 개선에 대한 학계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실시

5-2-4.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강화 **국**

□ 추진배경

- 국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활용 및 적극적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기록관리 핵심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기술 개발 필요

- 국가기록원 R&D 추진현황('08~'20)
 - (수행) 총 123개 과제(연평균 9개)
 - (분야) 전자 45개(37%), 비전자 74개(60%), 활용·서비스 4개(3%)
 - (주체) 용역연구 102개(83%), 자체연구 21개(17%)
 - (성과) 특허출원 45건, 특허등록 33건, 학술논문 게재 75건, 학술대회발표 183건

- 전자정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 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 연구 및 적용 필요

□ 추진목표

-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과제 수행 및 관리('20년~)
- 자체연구 및 공동연구 강화('20년~)

□ 추진내용

- **(지능화 기술)** 다양한 유형으로 대량생산되는 기록의 관리품질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록관리 단계별 지능화 기술 개발
 - ※ 지능형 전자기록관리 도입을 위한 중장기 R&D 사업 기획·추진
- **(전자기록 기반기술)** 전자기록의 안정적 관리와 장기적 보존을 위한 운용 기술의 지속적 개발
 - ※ 클라우드 환경,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시스템 설계, 장기보존 및 복원·복구 기술 등
- **(비전자 보존·복원)** 비전자기록의 보존·복원 기술 선진화 추진
 - ※ 기록매체 보존·복원 기술, 기록물 보존상태·환경 개선, 지능형 서고관리 등
- **(자체연구 강화)** 자체연구과제 지속적 발굴 및 단계적 확대
- **(성과 공유)** 연구개발 성과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촉진
 - ※ 국내·외 학회, 세미나 등 참여·발표 및 정보지 발간·배포

추진주체 :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5-2-5. 국가기록관리 교육 기반 강화 ㉔

□ 추진배경

- 기록물관리 종사자 및 전 공무원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운영 필요
- 다양한 기록관리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센터 기능 확대 필요

《기록관리교육센터 교육운영 현황》

구 분	'95년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과정 수	1	...	22	26	29	29	32	31	31	30	30
교육 횟수	1	...	204	248	262	254	253	343	319	376	288
수료자(명)	73	...	18,569	28,103	22,133	19,087	15,647	19,464	26,037	36,151	49,424

□ 추진목표

- 교육이수 법적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21년)
- 기록관리교육센터 독립기관화 추진(~'24년)

□ 추진내용

- **(재교육 강화)** 기록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육이수 법적 의무화 제도 검토
- **(강사 양성)** 기록관리 강사 양성 및 인증제 도입
- **(맞춤형 집합교육)** 학습자 요구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거점 기반의 전략적 집합교육 기획·확산
- **(교육콘텐츠 개발)** 사이버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콘텐츠 확충 및 핵심과정 중심의 표준교재 편찬
- **(교육센터 위상 강화)**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록관리 교육센터의 독립기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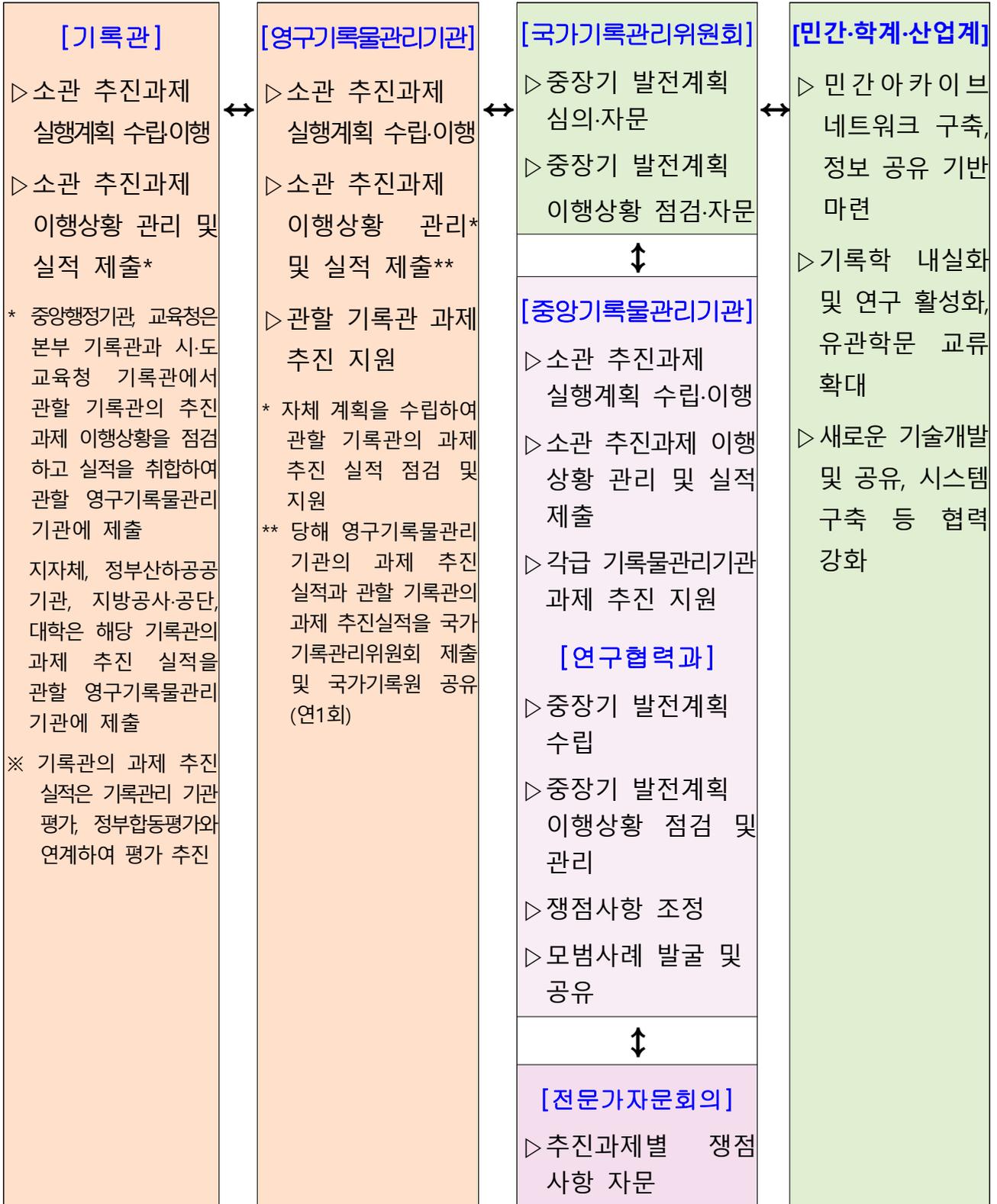
※ 국가기록원장 직속의 부서, 전문교육 기관화 및 독립기관화 등 모색

추진주체 : ㉔(기록관), ㉕(영구기록물관리기관), ㉖(국가기록원), ㉗(헌법기록물관리기관), ㉘(지방기록물관리기관)

Ⅶ.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2

과제별 추진주체

【1. 국민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및 기록문화 확산】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1-1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1-1-1	대국민 기록 접근권 확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1-2	학술·연구 지원 서비스 강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2 국민과 소통하는 기록문화 확산		
1-2-1	기록연대에 기반한 '기록의 날' 정착	기록물관리기관 민간·학계·산업계
1-2-2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기록문화 확산과 지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2.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2-1 철저한 기록화 기반 마련		
2-1-1	국가기록관리 평가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기록원 기록관
2-1-2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및 제도 개선	국가기록원 기록관
2-1-3	기관별 기록화 대상 기준 수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2-2 업무·기록분류체계에 기반한 통합적 기록관리 절차 정립		
2-2-1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 강화	국가기록원
2-2-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확립 및 단계적 확산	국가기록원 기록관
2-2-3	비정형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2-2-4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체계 재정립	국가기록원 기록관
2-2-5	기록 메타데이터 재설계	국가기록원

【3. 기관 기록관리 책임성 강화】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3-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3-1-1	기관별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록관 국가기록원
3-1-2	기록관리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국가기록원 기록관원
3-2 기관유형별 기록관리체계 개선		
3-2-1	중앙·특별행정기관	기록관 국가기록원
3-2-2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국가기록원
3-2-3	교육청	기록관 국가기록원
3-2-4	공공기관	기록관 국가기록원
3-2-5	대학	기록관 국가기록원
3-2-6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 국가기록원
3-2-7	한시·폐지기관	기록관 국가기록원
3-3 기록관의 인프라 확충		
3-3-1	기록관리 조직·인적 기반 확충	기록관 국가기록원
3-3-2	기록관 보존 시설·장비 확충	기록관 국가기록원
3-3-3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산	국가기록원 기록관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 강화】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4-1 영구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모니터링 강화		
4-1-1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1-2	대통령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국가기록원
4-1-3	헌법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헌법기록물관리기관
4-1-4	지방기록 영구관리체계 정립	국가기록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4-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관리체계 확립		
4-2-1	소장기록물 지적 통제 강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2-2	국가 중요기록물 수집 및 이관체계 개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2-3	기록물 안정적 보존기반 구축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4-2-4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체계 확립	영구기록물관리기관

【5. 기록관리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연번	세부과제명	추진주체
5-1 국가기록관리 거버넌스 구축		
5-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재정립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
5-1-2	국가기록관리 증장기 계획수립·이행점검 및 제도화	국가기록원
5-1-3	기록관리 네트워크 다각화 및 협력 강화	국가기록원
5-1-4	민간 아카이브 지원·협력체계 구축	민간아카이브 국가기록원
5-1-5	기록관리 학·협회 및 유관 단체 교류·협력 확대	학술단체 국가기록원
5-1-6	기록관리 산업 활성화 지원	산업계 국가기록원
5-2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할 강화		
5-2-1	국가기록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국가기록원
5-2-2	공공기록물법 체계 개편	국가기록원
5-2-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국가기록원 학계
5-2-4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강화	국가기록원
5-2-5	국가기록관리 교육 기반 강화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 및 과제별 실행방안 수립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등 최종안 확정('20.6월)
 - 추진배경·목적, 현황 분석, 비전과 핵심전략, 추진과제별 배경·목표·내용, 추진체계 및 일정 등
-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실행방안 수립('20.6~7월)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0.12월~'21년)
 - 국가기록원 시범 추진('20.12월), 각급 기관 확산·실행('21년)

□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매년말)

-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과제 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 TF 또는 실무회의, 연구용역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매년 추진계획 수립(연도별 업무계획 반영 등)

□ 추진과제별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연간, 수시)

- 중장기 추진과제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추진상황·성과 지표에 따른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간 또는 수시 추진상황 점검
 - 국가기록원(연구협력과)에서 추진 실적 취합·정리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보고
 -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소관 과제 및 관할 기록관의 실행 계획·실적 취합 후 보고
-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의 환류체계 마련
 - 국가기록원에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 추진상황 수시 모니터링
 -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포상·기록관리 기관평가 연계 검토
 - 기록관리 혁신 게시관 상시 활용, 연말 '연찬회' 등을 통한 공유·확산

구분	연도	내용
국가기록관리 혁신로드맵	2005 ~ 2008	<p>(비전) 참여민주주의 시대 기록문화 정착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효율과 책임의 동시 구현 - 국가기록관리를 위한 혁신동력 확보 - 시스템 혁신을 통한 지식정보화 달성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p>(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정책목표*, 9개 아젠다, 26개 혁신과제 <p>* 모든 공적 기록의 철저한 관리, 범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정보의 공개·활용 확대, 기록관리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p>
국가기록관리 선진화전략	2009 ~ 2013	<p>(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기록관리 실현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실 있는 기록관리로 신뢰받는 정부 구현 - 국가기록관리 기반강화로 선진인프라 확충 - 기록정보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 선도 - 우리 기록문화의 글로벌 국가브랜드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p>(12개 정책과제, 36개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철저 관리, 안전한 보존, 전문인력, 산·관·학 협력, 기록의 지식자원화, 통합서비스, 기록문화 세계적 전파 등
국가기록관리 중장기업무계획	2013 ~ 2017	<p>(비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가기록관리 실현 (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3.0 등 변화에 적극 대응 : 개방·공유 등 국정방향과 연계 - 전자기록관리 실질적 정착 : '15년 전자기록물 이관대비 단계적 준비 - 핵심기록물의 철저한 생산 : 대통령기록물 등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제공 : 이용자 유형별 기록서비스 마련 <p>(3대 목표, 10개 분야, 65개 세부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의 공유·활용 및 대내외 협력 기반 강화, 주요기록물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인프라 강화,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문화 확산
국가기록관리 혁신	2018 ~ 2020	<p>(공공기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분야*, 24개 혁신과제, 58개 세부과제 <p>* 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전문직 윤리 및 전문성 강화, 전자기록관리체계 재설계, 기록정보 공개·서비스 강화</p> <p>(대통령기록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분야*, 9개 혁신과제, 13개 세부과제 <p>* 생산·이관·수집, 등록·재분류·지정, 보존·복원·시스템, 서비스·전시·교육</p>

<생산>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회의록 등 정책관련 기록물 생산의무 대상 확대	회의록 보호조치 강화, 속기록 지정 확대		기록물 개념 및 기록관리대상 정비 (생산의무 등 개정, 정의, 등록·기록관리 대상 기준마련)
시청각, 간행물, 행정박물, 행정DB 등 관리체계 정립 및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정부간행물 수집·관리 제도개선
BRM 기반 업무와 기록분류체계 통합	기록물 분류 및 평가체계 확립(중앙, 지자체, 교육청 보존기간 준칙 작성)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사업·사안별 분류체계, 생산시스템 기록관리기능 강화)	평가정책 수립 및 도구 재설계(분류 체계 및 기준표 재설계, 보존기간 책정 준칙 마련, 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 기준 수립)
문서/과제관리카드 개발 확산			
		대규모 정부투자사업 기록물 통합관리 및 준영구 이상 보존(정책실명제 시행 및 점검)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 (통보대상 및 방식 검토, 시스템개선, 비밀기록물)
			기록처분동결제도 도입 (제도 도입 및 운영)
			기록부존재 공익침해 심사제도 도입

<RM · AM>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미이관기록물 DB구축, 이관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국가 주요 기록물의 지속적 수집·관리(중요 기록·특수유형·지자체 선별수집, 폐지기관 이관, 미이관 기록물 선별 수집 등) 미이관 경제부처 기록물의 누락없는 수집·관리 국가기록물의 누락없는 정리·등록으로 공공정보 공개 기반 마련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추진)	
기획수집(특정 사안별 네트워크 구축, 구술, 해외 및 민간소재 기록물)			
폐지·한시기관 기록물 수집·관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체계 구축 (직접관리기관 확대 등)	공공기관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체계 강화 (지원, 전문요원 배치, 기획수집, 소재정보 서비스) 대학 기록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 확대(협업체계, 컨설팅, 분류체계 정비, RMS, 평가)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제도정비, 경영평가 확대, 지원 체계 마련, 협업체계 강화)
전자기록 영구보존체계 구축	전자기록 보존전략(장기보존포맷 변환 매체수록 관리) 및 재해복구체계 마련 신뢰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 (보존포맷, 장기검증관리체계)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변환 및 검증시스템 구축·운영	전자기록 장기보존정책 수립 및 포맷정책 재설계
		민관 협업 기반 디지털포맷 기술정보은행 구축(기반구축 및 확충, 외부개방)	연구개발 활성화(기술정보)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체계 확립 : 전자화, 보존매체 수록			기록물 매체수록 전략 수립 (기준, 중장기 전략, 디지털화)
	구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현황 조사 및 구 전자문서 이관		
	필수기록물(Vital Records) 관리체계 구축		
비밀기록물 이관·관리		특수기록관 주요기록물 및 비밀기록물 수집·관리 강화(매년 15,000권)	

<활용>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유기록물 공개(공공기록법에 별도 규정 마련)
5년주기 재분류, 30년경과 공개원칙	주기적 공개재분류 체계화	비공개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재분류(20년경과 및 5년주기 공개재분류)	비공개기록물 재분류제도 개선(6호 비공개 재분류 유예)
	비공개 상한기간 마련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시기 단축(20년) 및 상한기간 설정	비공개 상한제도 개선(20년경과 공개원칙 도입 검토, 상한제도 도입)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다원적 검색체계, 계층기술, 각급기관 DB연계)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기록정보 활용 분야 확대	「기록콘텐츠 기획·설계 자문단」운영 정부기능 및 주요 국정과제별 기록콘텐츠 개발 다양한 커뮤니티 등 세분화된 이용자 그룹의 관심분야 지원(콘텐츠 보완 및 신규개발)	
공공기록 편찬 및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원문 온라인서비스, 학술연구 지원, 수요자 중심 서비스)	디지털기록의 통합관리체계 구현 (비전자 디지털화 100%, 디지털기록 정보센터 운영)	원문정보 서비스 비율 대폭 확대(디지털화 55%→70%, 원문서비스 4%→20%) 학술연구자를 위한 현장방문연구 여건 마련(인프라, 맞춤형 서비스, 검색도구 지원, 홍보)	공공누리 적용 및 철건목록 개인 정보보호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체계 (프로세스 개선, IPTV 기반의 동영상 기록정보서비스)	정부 간행물을 정책 연구자료로 활용토록 적극 제공(원문서비스, 콘텐츠 구축) 국민의 열람 빈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한 신속 서비스 실시 : 3일	
기록정보의 통합활용체계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각급기관 주요 기록물 통합을 통한 정보자원 그린화 (기록정보 통합 활용, 검색)	온라인·모바일·SNS 등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 기록물 공동 활용 체계 구축(국가기록포털과 부처·지자체 RMS간 통합검색)	
		기록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One-stop 서비스 구현(검색기능 고도화, 국가기록포털 사이트와 각급기관 RMS간 연계 확대)	
	기록물 기술(記述) 강화를 통한 기록 정보 지식자원화	이용자 맞춤형 기록물 기술 강화(해외수집, 민간기록물 기술) 쉽고 편리한 기록물 검색 기반 환경 조성(건상세기술, 변천연혁, 기록물 검색어사전 구축)	기록물 정리·기술모델 재설계
	국가기록물 고유 식별체계(UCI) 도입·확대		
		국가기록박물관 건립 추진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공감형 프로그램 개발·추진 찾아가고 싶은 기록문화 실록테마파크 조성	

<대통령기록관리>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대통령기록법 제정, 기록관 설치		대통령기록관 기능 및 위상 재정립 ('15년 개관)	디지털기반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재설계
	대통령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생산기관 컨설팅, 생산시스템 구축, 역대기록 수집)	대통령기록물의 상시적·체계적 관리 강화(생산기관 지원, 교육, SNS, E-mail 수집방안, 이관)	대통령기록물 생산지원 및 분류/평가 체계 개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구술공개, 행정박물 폐기, 지정기록물 열람)	- 다양한 기록유형별 등록 메타데이터 정의 및 업무방식 개선 - 대통령 지정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 - 대통령기록물 평가·폐기 추진
		대통령구술기록 수집 내실화 및 관리·서비스 체계 구축(구술아카이브 구축)	수집기록(구술·기증 등)물 관리 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존관리체계 확립(차세대 보안·보존시스템)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보존·복원 체계 강화(보존·복원 인프라 구축)	- 전자매체 관리기준 및 보존 절차 마련 - 보존공간 정비 등 보존환경 개선
		대통령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강화 및 고도화(영구보존포맷 변환 100%, 전자서명검증 50%, RFID 90%)	데이터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용
	국내외 대통령기록 소장·수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립	민간과의 대통령기록물 연구협력 확대(민간 기관과 MOU, 연구지원센터 기반 협력추진) 국내·외 민간 소장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확대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분류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체계 개선
		대통령기록물 분류·정리·기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검색 도구 개발(전거레코드 및 시소러스 구축사업 추진)	
		대통령기록물의 주제별 검색서비스 및 통시대적 정리 추진(주제분류체계, 정책자료집)	목록·원문 서비스 강화 및 포털 정비
		대통령기록전시관(세종시) 구축	전시기본계획 마련 및 교육·체험 강화
		대통령기록물 전문연구자 지원 강화(연구지원센터, 연구지원사업)	대통령기록연구 지원 확대

<민간·해외기록 수집 및 협력체계 구축>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민간기록물 관리체계(현황조사, 협력 체계, 관리방안 마련, 국가기록물지정 제도)	민간아카이브 활성화(기록사랑마을, 내 고장 역사찾기, S/W 보급)	민간기록물의 적극적 수집 (전시실, 포털 구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확대 및 보존관리 강화	
		기록사랑마을 지정을 통한 지역사회 기록 문화 공유·확산	
	산·관·학 협력을 통한 친환경 기록관리 연구개발(R&D)	기록보존기술 산업화로 신시장·일자리 창출 (보고서, 발표, 특허, 국산화)	
		민간소재 국가 중요 기록물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실시	
		방송사와 공동으로 국민공지·화합을 유도 하는 프로그램 개발	
해외기록물 수집	해외 한인 기록유산의 종합 수집·활용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주요 기록물 수집 확대 및 활용 체계 구축(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수집)	
		재외동포기록 기획 수집 및 국가적 관리 체계 구축(재외동포기록센터 구축, 10만매 수집)	
기록관리 국제협력	외국과의 기록관리분야 협력 내실화 (MOU) / 기록관리 국제 교류협력 강화	국제 교류협력 증진(국제회의 참석, MOU)	
		글로벌 기록관리교육 운영(국제기록문화 유산과정)	
	기록문화의 국가브랜드화 추진으로 녹색 성장기반 조성(국제기록엑스포 개최)	2016년 ICA 서울총회 개최 준비	
	세계 각국에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 적극 홍보(외국어 동영상, 기록문화 유산 지도, 간행물 배포)		
	남북 기록물관리기관간 교류협력 추진		

<조직>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기록관리체계 효율화 및 협력체계 구축(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능·역할·위상 재정립, 협력·지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및 예산지원근거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지원	지방기록관리제도 개선(민간기록물 수집권한 부여) 및 설치 촉진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록관 기능정립 및 조직인력 배치 기준 정비
		각급 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업·소통 체계 강화(표준화 작업반, 연찬회)	
		기록관리 평가 내실화 (포상, 협의회, 컨설팅)	기록관리 기관평가 제도 개선
		기록물관리기관 보존시설·환경관리 맞춤형 컨설팅	
	처리과 기록관리체계 확립(기록관리 책임관, 담당관 등 직위별 역할분담), 신규자 교육		

<전문인력 · 기록문화>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능력발전 (전문인력 수급계획, 전문인사관리 제도, 대학교육과정 인증제도, 교육 강화)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인턴과정, 협동교육과정, 교육 확대, 인사교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체계적 관리 (자격증 발급, 채용지원, 인사교류-매년 4명)	기록관리 전문직 연구 활동 및 인사교류촉진
	각급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지원		기록관리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기록전문직 직무윤리 강령 제정 및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기록관리 직무윤리 교육 활성화
		기록관리교육 확산을 위한 협업·소통 체계 강화	
기록관리 의식개혁, 윤리강령, 대국민 홍보강화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록문화교육 추진	

<시스템>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시청각기록물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비표준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웹기록물 아카 이빙 시스템 구축		전자기록 유형별 관리체계 재설계(수집 관리시스템 고도화, 이관모델 재설계, RMS 기능개선)
생산기관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표준 RMS	표준 RMS 확산(대학, 공공기관 포함)	전자기록의 안전한 생산·보존·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RMS 보급완료, 이관 기능 고도화)	
영구보존단계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표준 AMS 확산(16개 광역시도)		
			메타데이터 관리 혁신 (정책마련, 데이터품질관리체계 구축)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전자기록물관리 정보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통신망 이중화, 망분리 등)	

<시설·장비>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국가기록원 서고간 역할분담체계 구축			
서고신축, 중간관리시설 설치, 서고 리모델링, 장비 확충 등	중간기록관리시설 건립	보존서고 인프라 확충 및 시설·환경 강화(국가중요기록물 보존서고, 실록 서고 개선)	
	각급기관의 기록물 RFID 인프라 구축	기록물 보안 및 관리체계 강화(RFID 확대)	

<표준화>

혁신로드맵(2005~2008)	선진화전략(2009~2013)	중장기업무계획(2013~2017)	혁신(2018~2019)
기록관리 표준 제정 및 매뉴얼 개발	기록관리 표준 고도화 및 확산(표준 이행 인증체계 구축 포함)	전자기록관리 표준 정비 및 현장 활용성 확대	